

## 환경부, '환경보건자문위원회' 운영

환경부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보건 정책분야의 전문적인 정책개발과 자문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지난 4월 개최하였다.

환경보건자문위원회는 예방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백도명 교수, 환경독성학 전문가인 연세대 신동천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경남 고성군과 금년 경북 군위군 등의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과 대기오염 및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환경성 질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1차 환경보건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폐금속 광산의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방향에 대해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 혈중의 중금속 오염농도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동 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건 감시·경보체계 구축 등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마련 등 본격적인 환경보건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개발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이동경로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개발완료 했다. 2001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이번에 완성된 이 시스템은 폐기물적법처리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마트를 구축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적법처리시스템이 완성됨으로써 이와같이 폐기물이

동경로가 한 눈에 파악되어 폐기물 무단투기나 방치를 막아 깨끗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축적된 자료는 국가 폐기물 정책수립에 긴요한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인계전표를 관리하는 인계시스템, 인터넷으로 폐기물 인·허가 사항을 해결하는 인·허가 시스템, 지역별, 업종별 폐기물 발생 이동경로를 파악 분석하는 분석시스템(OLAP), 자연재해나 통신망장애등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경기도 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이 시스템의 완성으로 2006년도까지 건설폐기물 포함 약 60,000개 업소가 사용 예정인데 60,000개 업소가 모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종이전표 사용에 따른 인계서 작성이나 우편발송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약 1,1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기존 종이인계서 확인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주어 행정업무 간소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향후 공사는 대한민국 성인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휴대폰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ARS/모바일시스템을 개발하고, 업체 자체시스템(ERP)과 적법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계획도 추진 고객편의를 도모하여 고객 곁으로 더욱 다가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올해 393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지난 8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257% 증액된 393억원을 지원하는 세부 보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보급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원과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보조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예산의 일부(약 100억원)를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기업에 할당해 집행토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복지시설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해 발전 차액지원(한전구매가격-전력거래소거래가격)은 물론 추가적으로 설치비의 30%를 보조하기로 했다.

##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는 2010년까지 환경기술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중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2005년도 신규지원과제(88개 과제, 229억원)를 확정·발표하였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오염처리기술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생태계복원, 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 보전기술분야 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8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에 신규 지원되는 88개 과제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중장기 전략기술 8개 과제, 실용화기술 30개 과제, 공공기반기술 16개 과제, 미래원천기술 22 과제, 실증사업화 과제가 12개 과제이며, 연구기관별로는 기업체(부설연구소) 40개 과제, 대학 35개 과제, 출연연구기관 9개 과제, 기타 4개 과제로서 기업체(부설연구소)가 45.5%, 대학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지난 1월에 공고한 '05년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신청한 298개 과제에 대하여 2~3월동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1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패널심사 및 3차 총괄조정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내 각실·국(담당과)으로부터 정책 연계성 검토도 거쳤다.

한편 작년부터 추진중인 「Eco-STAR Project」의 2개 사업단과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5월까지 사업단 1단계

평가와 수행과제 연차평가를 진행하여 지원과제를 확정하여 2005년에 총 6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구과제의 종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추적관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선정단계에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제를 도입하여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에 미흡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과제 종료후에도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 등 활용현황에 대하여 사후추적관리를 실시하여 실용화 촉진을 위한 추가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며, 우수연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신청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시행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강, 하천 물 속 생태정보 알려준다

해양수산부는 한강 등 주요 강, 하천 등지의 물 속 생태정보를 알려주는 알림판을 설치해 내수면을 찾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오는 5월 중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주요하천의 분류 위주로 유어객이 밀집되는 지역 또는 유어행위로 인해 유어자와 지역 어업인과의 충돌 우려가 있거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어행위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등 전국 100개소에 우선적으로 알림판을 설치키로 했다.

또 2008년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뿐 아니라 주요 지방하천을 포함해 총 600개소의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주 5일 근무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늘면서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의 레저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은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대

표적인 수산동물과 포획이 금지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해야 할 수산동물을 컬러사진을 곁들여 알려주게 된다. 또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은 어떠한 어구 또는 방법으로 포획이 가능한지와 불법어업행위자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등도 게시된다.

내수면 생태정보를 알려주는 알림판이 설치되면 내수면에서 유어하는 사람들에게 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게 돼 어족자원 보호와 더불어, 강이나 하천이 생태학습의 장이 돼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자연친화적인 레저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교부, 학교·오피스텔 내진설계 기준 강화

이달부터 학교와 오피스텔의 내진 설계기준이 지금보다 약 20~25% 정도 강화되며, 2층 이후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진대비 건축물 설계 및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6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 등급이 종전에는 2급이었으나, 앞으로는 3층 이상인 학교의 경우 1급으로 강화돼 내진성능이 약 20% 정도 강화된다. 또 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중요도 등급이 1급이었으나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럴 경우 내진성능은 지금보다 약 25% 정도 향상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기준이 특급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와 주변 건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골조, 창호공사 등을 보다 튼튼하게 해 내진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 목구조, 조적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구조유형별로 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구조기준이 따로 없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취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혼련, 고시 등 19종으로 각기 규정돼 있는 것을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통합해 건축주·설계자·시공자 등 건축관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지붕높이 기준으로 13m(처마높이 9m) 미만까지 건축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붕높이 기준으로 18m(처마높이 15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KAIST, 친환경 수소저장 방법 개발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활용, 섭씨 0℃ 부근의 온도에서 수소 분자가 얼음 입자 내에 만들어진 나노 크기의 수많은 빈 공간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세계최초로 규명됐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지난 7일 생명화학공학과 이훈 교수팀은 이같은 자연 현상적 수소저장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관련 연구결과 논문은 세계적 과학전문저널인 네이처지(誌) 지난 7일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논문으로 선정돼 해설 및 전망기사와 함께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하 252℃ 극저온의 수소 끓는점에서 수소 기체를 액화시켜 특별히 제작된 단열이 완벽한 용기에 저장하거나 350기압 정도의 매우 높은 압력에서 기체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널리 사용해 왔다. 하지만 수소는 제일 작고 가벼운 원소로 어떤 용기의 재질이건 속으로 침투하는 성질 때문에 이 방법들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극저온이나 높은 압력의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소저장합금, 탄소나노튜브 등을 이용한 차세대 수소 저장 기술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특수 물질들의 저장 재료로서의 한계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이 교수의 연구결과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 물질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친환경적인 수소 저장 방법이다.

순수 물로만 형성된 얼음 입자에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수한 물에 미량의 유기물을 첨가해 얼음 입자를 만들 경우, 내부에 수많은 나노 공간을 만들게 되며, 바로 이 나노 공간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저장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상의 온도에서 수소가 저장되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얼음 입자가 상온에서 물로 변할 때 저장된 수소가 자연적으로 방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소의 저장과 방출이 짧은 시간 내에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더욱이 수소를 저장하는 물질에 물을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저장합금이나 탄소나노튜브 등의 수소저장 재료와는 달리 거의 무한대로 얼음 입자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방대한 얼음 입자로 이뤄진 공간에 수소의 대규모 저장이 가능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얼음 입자에 저장한 후 이를 최종 에너지원으로 이용, 수소를 연소시키거나 연료전지에 사용하면 다시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뉴스레터 발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정보전달 위해 「신·재생에너지 뉴스레터」를 발간했다.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등 경제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새로운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체제의 변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 유일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 1차에너지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뉴스레터」는 국내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레터는 신·재생에너지 주요기관의 행사와 정책에 대한 Event,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관심사항을 다룬 Focus, 최신 신·재생에너지 정보 및 소식을 제공하는 News의 세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며, 뉴스레터 수신자는 사실위주의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받음으로서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뉴스레터」는 지난 4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첫선을 보였으며, 격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뉴스레터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 정부, 불법 화학물질 특별단속 예정

불법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단속이 빠르면 올해안에 집중 실시될 전망이다.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해당된다.

지난 10일 법무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양부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환경부의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 관리실태 조사에서는 5개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화학물질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요구됐지만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수입중단에 따른 경제 파급 등을 고려, 자진신고기간을 먼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산업자원부도 제도기간 없이 불법수입 화학물질의 일제단속을 벌이면 수입중단 등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감안,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기간 동안 화학물질 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나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실험자료의 생산 지연으로 신고를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기관에 의뢰 후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실험의뢰 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불법수입 화학물질 신고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에 의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유해성 심사 항목을 현재 3개에서 단계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불법수입 화학물질 근절을 위해 작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화학물질 불법수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또 수입업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일부 정비했다.

## 한국간자재시험연구원, 환경마크 인증시험 국내서 가능

휘발성유기용제·포름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해물질에 대한 유럽 환경마크 인증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비용·기간 단축 등으로 업체들의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간자재시험연구원이 유럽 및 미주지역의 대표적 시험기관인 Eurofins와 휘발성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소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하는 건축자재, 섬유제품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 및 포름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환경인증(Labeling)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기술표준원 정양환 인정제도과장은 “이번 상호인정으로 수출지원 측면에서 볼 때 인증시험 소요 비용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요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절차는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국내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외시험과정에서 관련제품 핵심기술 및 신기술 노하우 유출 방지와 국내 시험기관의 위상 제고로 개도국의 시험수주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유럽의 환경규제 분야인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지침(WEEE),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폐기차량 처리 지침(ELV) 등에서 규제하는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수산과학원, 최초 적조 전문서적 발간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 영규)에서 매년 발생하는 적조에 관한 종합 전문서적인 ‘해양 적조’가 국내외 전문가인 김학균 박사가 수년간 집필한 끝에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해양 적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조의 연구역사 및 발생원인, 적조생물의 분류와 유독종의 생태 및 독성, 휴면포자, 세계연안의 적조 발생과 변천, 적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식중독, 적조발생방지와 피해경감 대책 등 해양 적조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470여 페이지에 걸쳐 서술함으로써 적조 백과사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어패류를 대량으로 폐사시키는 유해적조 현상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서해안에서 매년, 장기간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전문서적이 없어 적조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적조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문서적이 발간됨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수산과학원에서는 이번 해양적조 전문서적이 출간됨으로 인하여 한국의 적조 연구, 피해 경감대책 수립

및 국제연구협력 등에 기여함은 물론 또한 국민들이 적조의 발생원인과 그 피해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적조 예방과 방제 대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건교부, 아파트 조용해진다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dB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기준이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공진현상으로 바닥판 두께를 현재(180mm)보다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단체, 주택관련 협회, 연구원 등의 전문가 회의(3월 14일)를 통하여 거실에서 중량충격음을 만족할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시에 '성능기준(50dB 이하)'과 '표준바닥구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했다. 건교부는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환경연구원, 생태계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자연생태계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사진,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국가 생태계 정보 통합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97년부터 실시한 전국 생태계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생태계 전문정보', '생태계 일반정보', '교육, 홍보 콘텐츠'로 구성될 생태계 정보 네트워크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우수생태계정밀조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의 조사보고서 전문과 사진 및 동영상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가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자연환경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에게 서비스되는 '생태계 전문정보'에는 전국자연환경조사(육상 및 해안 348권역 포함), 자연동굴, 해안사구, 무인도서 등 우수생태계정밀조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 국립공원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전문과 데이터베이스화한 현지조사표, 출현종 목록, 사진 등이 제공된다.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되는 '생태계 일반정보'에는 생태계 전문정보에 수록된 각종 생태계 정보 중 자연경관, 서식동 식물상 등에 대한 생태계 개요와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교육·홍보 콘텐츠'에는 사이버생태탐방(자연관, 식물관, 동물관)과 생태체험교실(자연생태다큐멘터리, 갤러리, 생태탐방안내), 생태특별관(멸종위기종복원, 우수생태계복원)으로 구성되고 각 콘텐츠별로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

## 「월간 '환경기술인」 정기구독안내

- 구독방법 : 무통장 입금 기본
- 구독료 : 6만원(1년)
- 구입문의 : (02) 852-2291(연합회 사무국)